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단체 5면 참고)

담 당 : 경실련 사회정책팀(남은경국장, 가민석간사 010-4101-0206 / ka9202@ccej.or.kr)

제 목 : [보도자료]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보도일자 : 2024. 2. 20.(화)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2. 20.(화)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2. 20.(화) 09:20, 국회 소통관
- 공동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 순 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단장
 - 단체 발언
 -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교수
 -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
 - 회견문 낭독 :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2024년 02월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이번 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최근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되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김성주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단체 첫 발언을 맡은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부터 최소 10년 이상 논의 되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 고 지적하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 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제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남았다” 고 지적하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났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 고 촉구하였다.
- 한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 붙임 : 기자회견문, 공동행동 단체 명단

〈기자회견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진료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또한 문제투성이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18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의 확대 논쟁은 2020년 촉발된 이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는 정원을 확대한다면서도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만 유독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공백은 의사수 절대 부족과 함께 시장 논리에 의해 양성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 등 소위 돈이 되는 분야와 수도권에 쏠려 생겨난 것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공적 양성과 배치 방안 부재’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가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한다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실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사의 양성과 배치, 복무에 대한 대안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의료시장화, 시장실패로 인한 인력시스템 공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동·시민사회·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60일의 계류 기간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연시켰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가 보이지 않는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동안 법안 논의도, 처리도 하지 않은 만큼, 이제 는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가 시급하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논의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다.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확대될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회기 내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

국회는 21대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즉시 도입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등진 정치 세력과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받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2월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2024년 02월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이하 281개 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복시민인권연대회의(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강릉의료원지부,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 강원도재활병원지부, 강원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동해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정선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태백병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상지대한방병원지부, 속초의료원지부, 영동지역지부, 영월의료원지부, 원주연세의료원지부, 원주의료원지부, 정선군립병원지부, 춘천성심병원지부, 혈액관리본부지부, 혈액수혈연구원지부, 보건의료노조경기지역본부, SRC지부,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지부, 케어일요양원분회, 경기적십자기관지부, 경기비정규직지부국립교통분회, 경기비정규직지부의정부성모분회, 광명성애병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국립암센터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경기요양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안산병원지부, 동국대병원지부, 메트로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지회, 보훈병원지부남양주요양원분회, 새로운경기도립, 정신병원지부, 성남시의료원지부, 성남중앙병원지부, 성빈센트병원지부, 성빈센트병원새봄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안산시지부의료사협분회, 안산시지부효진요양원분회,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원광대산분병원지부, 원진녹색병원지부,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일산백병원지부,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한림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강진의료원지부, 광주기독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전남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순천병원지부, 목포의료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공무직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공무직소록도병원, 보성아산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광주지회, 보훈병원지부광주요양원분회, 성가톨릭병원지부, 순천생협요양병원지부, 순천의료원지부, 원광대광주한방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조선대병원지부, 천주의성요한병원지부,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차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대구병원지부, 김천의료원지부, 대구경북적십자, 혈액원지부, 대구시지노인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대구지회, 상주적십자병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영주적십자병원지부, 파티마병원지부, 대구경북지역지부영남분회,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지역본부, 건양대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대전병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지부, 대전을지대병원지부, 대전을지대병원새봄지부, 대전충남지역지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보건복지공무직공주병원, 보령아산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대전지회, 보훈병원지부대전요양원분회, 서산의료원지부, 중부혈액검사센터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부산지역본부, 고신대복음병원지부, 남부혈액검사센터지부, 대남병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백병원부산지역지부, 보훈병원지부부산지회,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부산성모병원지부, 부산의료원지부, 부산적십자기관지부, 부산지역지부, 해운대백병원새봄분회, 일신기독병원지부, 침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강동경희의료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건국대학교병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고대안암새봄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지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국립재활원지회, 국립중앙의료원지부, 금강아산병원지부, 금천수요양병원지부, 남부혈액원지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 녹색병원지부, 동부혈액원지부, 마인드프리즘지부, 보훈병원지부서울지회,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 상계백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서울백병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 서울시북부병원지부,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서울아산병원지부,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서울아산병원HDC랩스분회, 서울아산병원키오스크분회, 서울적십자병원지부,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새봄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새봄지부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화의료원새봄지부목동병원분회, 중앙대의료원지부, 중앙혈액검사센터지부, 중앙혈액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지역본부, 거창적십자병원지부, 경남혈액원지부, 경상국립대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울산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창원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동강병원지부, 마산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김해요양원분회, 양산병원지부, 울산병원지부, 울산혈액원지부, 진주시지부, 진주의료원지부, 진주한일병원지부, 통영적십자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국립마산병원분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국립부곡병원분회,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지역본부, 가천대길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인천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재활과학연구소지부, 보훈병원지부인천지회, 부천성모병원지부, 부천세종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신천연합병원지부, 인천기독병원지부, 인천사랑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지부, 인천의료원지부, 인천지역지부, 인천혈액원지부, 인하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전북지역본부, 군산의료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예수병원지부, 원광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전북지역지부, 전북혈액원지부, 정읍아산병원지부, 진안군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충북지역본부, 건국대충주병원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질병관리청지회,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회, 청주의료원지부, 충북적십자기관지부, 충주의료원지부, 혈장분획센터지부, 충북지역지부, 지역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지부, 제주혈액원지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의료정의실천연대, 의료소비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취약암환우회(행복하게살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